

# 농생명·문화관광·미래첨단·고령친화 등 '핵심'

도·시군·정치권  
도민들이 함께 만든  
자치도 출범 '눈앞'

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7여  
일을 앞두고 있다.

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 
를 통과하고, 26일 공포된 '전  
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 
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  
별법'은 131개 조항, 333개 특  
례가 부여됐으며, 5+3으로 표  
현되는 농생명산업, 문화관광  
산업, 고령친화산업, 미래첨단  
산업, 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  
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  
프라, 인력, 제도 등 3대 기반을  
갖출 수 있게 됐다.

전북도는 앞으로 이같은 특례  
를 구체화 하기 위해 특별법 전  
부개정안이 공포된 뒤 시행일  
인 올해 12월 27일까지 1년의  
시간동안 도민들이 삶의 질을  
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  
인 실행계획을 만들고 미래상  
을 만들어 가는 작업에 들어간  
상황이다.

특히,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 
가운데 이른바 '전북형 특례'  
로 꼽히는 42개, 103개의 특례  
가 담겨 있어 산업화에 뒤처  
졌던 전북이 스스로 발전해 획  
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도와  
시군, 정치권, 도민이 함께 만들  
어가는 특별자치도로 추진된다  
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 
있다.

이에, 갑진년 새해를 맞아 양  
지면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의  
주목받는 특례에 대해 정리해  
본다.



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7여일을 앞두고 있다. 사진은 지난해 11월 2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'전북특별법 국회 통과 염원 한마음 행사'.

## ▶▶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- ①농생명

### 국가 농생명산업 선도지로 대전환

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수립  
스마트농업 육성·진흥 등 핵심

전북도가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고 산업은  
농생명이다.

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, 전북은 과  
거 전통적 농도 및 식량생산 기지로서 역할에  
서 벗어나 국가 농생명산업의 수도, 농생명산  
업의 선도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 
△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 지  
정, △스마트농업 육성·진흥사업 지원, 곤충  
산업 육성,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 농생명지구  
내 지원사업 특례 △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특  
례 등의 핵심 특례를 법안에 담았다.

'농생명산업 지구'는 정부(농식품부) 정책  
목표 중 하나인 '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' 정  
책에 부합해 집적화된 농생명 자원·인력 등  
을 바탕으로 농생명 특화산업과 관련 신산업  
발전을 도모하는 혁신 지구이다.

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스마트농업 확산,  
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, 케이푸드  
(K-Food) 수출 확대 및 케이(K)-농업 해외전  
파 등이다.

이를 통해 전북은 특화산업인 식품, 종자,

미생물, 스마트농업 등의 생산·가공·유통·  
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, 각 분야에 규제  
완화와 육성·지원 등의 개별 특례 마련으로  
농생명기업 육성 및 농가 소득을 끌어올려 고  
부가 국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전략  
이다.

특히, '농생명산업지구' 내에 농생명산업의  
기초가 되는 핵심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 
서는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전용 허가와 농업  
진흥지역 해제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됨에 따  
라, 농생명지구 내 농지 활용 특례를 마련해  
농생명 산업기반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 
있도록 했다.

법 개정에 따라 이제 '농생명산업지구' 내  
농업진흥지역을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가  
해제할 수 있는 권한, '농생명산업지구' 내  
농지전용 허가(협의)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  
하게 된다.

또한, 2025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새만금  
농생명용지에 대해서도 정부 및 관련기관  
과 함께 효율적인 개발, 활용방안에 대해  
같이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 
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·운  
영에 관한 조항(제26조)도 이번 개정안에 포  
함했다.

## ▶▶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- ③국제케이팝학교 설립

### '제2의 BTS·블랙핑크 배출한다'

전국 최초로 공립으로 설립 가능  
전문인력 대거 양성 텃밭 마련  
전북자치도 인지도 제고 등 효과

오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자치도가 특례  
를 발간받아 전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케  
이팝(K-Pop)의 성지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.

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42조에 근거한  
특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케이팝을 공교육 시  
스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국제케이팝학교 설  
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케이팝 전문인력을 대  
거 양성할 수 있는 텃밭이 마련됐다.

최근 방탄소년단(BTS), 블랙핑크 등 세계적  
인 팝스타들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맞고 있  
는 케이팝 문화가 국가 경제적, 외교·문화적  
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  
하고 현재까지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 
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 체계적 문화정  
책적 발전이 어렵고 시장 상황에 따라 취약점  
이 노출되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  
황.

또한, 해외 청소년들의 케이팝에 대한 관심  
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제도

적 한계로 케이팝 전문교육기관이 해외에 설  
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
케이팝 관련 종사자, 외국인 학생 등을 유치  
할 수 있는 국제학교 특례는 국가적으로 매우  
시급한 실정이다.

이같은 국내 현실을 타개하고 문화산업을  
발전시키기 위한 돌파구로 전북특별자치도  
법 개정안에 관련 특례를 포함시킴으로써 미  
래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새만금에 체계  
적·전문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립학교  
인 케이팝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.

전북자치도는 케이팝 국제학교와 관련 교육  
기관을 중심으로 문화·주거·상업 등 자족적  
임시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케이팝 국제교육  
도시로 키우겠다는 목표다.  
더 나아가 도내 관련 예술문화자원과 연계  
해 케이팝 문화연대 공동체인 케이팝 국제교  
육벨트로 만들어 국가 문화경쟁력 증진과 지  
역 문화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  
출하는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는 계획이다.

이를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 효과와 한국의  
케이(K)-문화를 대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 
고투자로 성장하고, 이와 연계해 전세계에 전  
북자치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직·간접적  
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## ▶▶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- ②생명서비스 산업화

### 고령친화사업, 미래성장동력으로

고령친화·사회서비스 단지 지정 가능  
고령인구 증가 따른 복지 수요 대응

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겨진 생명서비  
스 산업과 특례는 '고령친화산업 시장 확대  
및 국가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육성'을 위해 전  
북자치도 내에 고령친화·사회서비스산업복  
합단지 지정·고시를 가능하게 하고, 지역실  
정에 맞는 계획의 수립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 
생명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 
이다.

또한,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  
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·사회서비스산업  
전문교육연구기관 운영과 재단의 설립 및 복  
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대한 내  
용을 담고 있다.

먼저, 고령친화·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 
인지선정 및 개발 특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은  
입지를 선정하고 복합단지로 지정·고시 할  
수 있도록 하고, 도지사는 필요시 복합단지  
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  
부 장관에게 요청 가능하도록 했다.

특히,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 
추세로, 고령 친화·사회 서비스 산업 개발은

일자리 창출 효과 등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 
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특례 중 하나로 꼽히고  
있다.

또한, 고령 친화·사회 서비스 산업 복합단  
지의 성공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연구 및 해외  
시장 판로지원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만의  
특수성과 목적을 위해 반영되는 종합계획수립이  
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, 도지사가 각 장관들  
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  
도록 고령친화·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진  
흥계획의 수립을 특례에 담았다.

고령친화·사회서비스산업 전문교육연구기  
관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·사회  
서비스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문성  
향상을 위해 교육연구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  
록 했다.

고령친화·사회서비스산업진흥재단의 설립  
및 지원은 고령친화·사회서비스산업 연구개  
발기관 및 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  
할 수 있으며 재단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 
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은 복합  
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 기관 등의 우수한 전  
문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해 인구소  
멸 대응에 기여하자는 특례다.

## ▶▶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- ④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

### '상공에 드론... 바다엔 무인선박...'

설계부터 인증 전 단계로 확산  
일자리 창출·인구 유입 효과

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농생명, 생  
명서비스 등과 함께 주목받는 특례가 바로 새  
만금 무인이동체 산업육성 특례다.

법 제41조(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)에  
따르면 도지사는 드론, 자율주행차, 무인농업기  
계,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 
상용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무인 이동  
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관련 시책을  
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.

초저음, 초연결이 전 산업과 사회에 혁신을  
아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과 자율주  
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성장 속도와 시장  
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행보가 광속급으로  
매우 빠른 상황.

드론은 현재 지적 측량, 위험물 탐색, 비료  
살포기, 무인 택배 등 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  
간 분쟁에서도 방산무기로 활용될 정도로 다  
양한 분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관련 산업  
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.  
자율주행차 역시 마찬가지로, 세계는 자율주행  
차 시장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

벌이고 있다.  
자율주행에서 앞서나가는 테슬라, 웨이모를  
추격하기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, 도  
요다, 현대 등 세계 전동차 업체들도 관세 뒤  
집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.

전북자치도도 이번 특례의 힘을 빌려, 무인  
이동체 산업을 전북의 혁신전략 산업으로 키  
워 나갈 계획이다.

새만금에 드론과 자율주행차, 무인농업기계,  
무인선박 등과 같은 '최첨단 무인 모빌리티  
종합 실증단지'를 구축하고, 이를 설계에서부  
터 제작, 시험평가, 실증·인증 전 단계로 확  
산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.

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  
기관들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위한 고급인력  
양성 작업을 병행하면 새만금내 일자리 창출  
과 인구 유입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  
다.

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면 10년후 새만금  
항공에서는 드론이 날고 육상에서는 완전한  
자율주행, 바다에서는 무인 선박이 오가는 상  
황을 목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.

'상상하는 만큼 현실이 될 수 있는 새만금'  
이 가시화되고 있어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  
고 있다. ◆7면이 계속